

# 장외투쟁 나선 민주...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총공세

국조·특검 범국민 서명운동 나서  
촛불집회 연계 목소리도 커져  
국힘 “참사 이용한 정치공세”  
이상민 경질 등 인적쇄신 주목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이번 주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장외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며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고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진한 수사책에 여론은 야권에 아무래도 유리한 흐름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정조사 협의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여야 간에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는 여의도역을 찾아 발대식을 벌이고서 곧바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호소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진보 진영 재야 세력과 손을 잡고 대어 총공세에 나서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3일부터 16일까지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한다. 14일에는 인천 서명운동 발대식-경남도당이, 15일에는 강원도당-대전시당이, 16일에는 부산시당-제주도당이 각각 발대식을 열어 서명운동 확산에 동참한다. 공교롭게 각 시도당 발대식 종료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이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 수가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공개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당원이 약 12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10만 명은 이른 시일 내에 넘길 수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심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100만 명 이상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인적쇄신책이 미진할 경우 장외의 촛불집회 등과 연계해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도 녹록치 않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장외 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의 강경 노선은 야권의 협력 구도에 균열을 부를 수 있다. 당장, 이 대표가 유족 동의를 전제로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자고 했지만,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큰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한층 더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을 야권 자체적으로 분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한다면 야권이 조사 범위나 기한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상당

기간 정국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첫 예산안 처리도 부담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등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단행된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이 반감되는 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순방 전날 참모진에게 “정치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언급한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강대강 구도가 연말 정국을 열어붙게 만들 것인지, 서로 날 걸음씩 물러날 것인지 아직까지 미지수”라며 “민생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중적 측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축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국힘 친윤-비윤 갈등 재점화...이태원 참사 책임론 파열음

이상민 장관 경질 놓고 신경전

수석 퇴장 주 원내대표 공개비판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친 윤석열)-반윤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가 마무리되며 정진석 비대위가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뼈저리게 감지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비주류 당권주자로 여겨지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선봉에 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 혹은 경질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출입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배제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잠잠한 듯했던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SNS에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게,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썼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탄으로 해석됐다.

유 전 의원도 유사한 톤으로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현 여권 주류에 ‘앙금’이 깊은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목소리를 키우는 형국이 되자, 친윤계가 반격에 나섰다.

친윤계 맹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일 당원 행사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통령 영향력과

비교하면 1천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는 윤 정부가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며 비주류 당권 주자들을 압박했다.

친윤계는 급기야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을 퇴장시킨 것을 두고 발끈하면서 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윤의 원내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강승규-김은혜 수석을 왜 퇴장시키나”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비윤계간 파열음의 배경으로 차기 당권경쟁을 앞둔 계파간 주도권 잡기가 거론된다. 지도부는 갈등 수습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친윤계의 비판에 “자세한 사정을 잘 의원과 이 의원이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오는 14일 당내 4선 의원 회동을 시작으로 선수협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애초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한 당내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계획한 일정이지만, 당내 파열음을 자제하고 야당을 상대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걸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배상 검토

이태원 참사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압사와 관련해 참모진에게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11일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제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그런 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고 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후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번 참사와 관련,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기존의 ‘유일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걸로 보인다.

주무 장관으로 ‘경질론’의 최후의 대상인 이 장관 거취에 여력을 남겨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상 규명 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현장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 명문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시급히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길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는 현장 대응 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대응 의료진 등 현장 인력을 거론하며 “최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 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 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적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 광산구 수전해 발전사업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업법 시행령 제4조의2규정에 따라 광산구 하남산단3번길14-26(장덕동) 수전해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1) 광산구 하남산단 수전해발전사업
- 위치 / 면적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로3번길14-26 (장덕동)  
2) 약100평

2. 발전사업 주요내용

- 설비용량 : 900kw
- 상업운전에정일 - 2024년12월
- 운영기간 - 상업운전일로부터20년간

3. 허가신청자: 세광에너지(주)

- 4. 열람/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열람/의견제출기간 : 2022년11월14일(월)~25일(금)
  - 제출방법 : 열람처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작성
  - 열람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길14-26
  - 기타문의사항

-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길14-26
- ② 연락처 : 010-7362-6689
- ③ 이메일 : kkh6868@daum.net

2022년 11월 14일  
세광수에너지(주)  
대표 김 남 천